



첨단반도체기술센터 건립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보도 주요내용〉

10.11.(수) 국민일보 「내년 역대급 ‘짠물 예산’에... 첨단반도체기술센터 건립 난항」에서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비용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산업부가 신규 사업인 ASTC 예산을 새로 따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내년 국가 R&D 예산을 삭감하면서 ASTC 설립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현재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12월)이며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대규모 R&D 재정사업(총사업비 500억원,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제38조의 3)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

□ 사실관계가 정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한 추측성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내년 예산안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10.에 배포한 기재부 보도정정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예산실 연구개발예산과	책임자	과 장	김준철 (044-215-7370)
		담당자	사무관	이동석 (ecko7080@korea.kr)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	책임자	과 장	이규봉 (044-203-4270)
		담당자	사무관	라정인 (mg1116@korea.kr)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 기반시설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내용 >

- 2023.10.10. 중앙일보는 「尹은 “총력전” 외치는데… 반도체 단지 인프라 예산 ‘0원’」 기사에서,
 -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했지만, 내년 예산에 전기와 용수 등 필수 기반시설 조성비용은 배정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 정부는 법령에서 정한 대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용수, 전력, 도로, 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투자계획(총사업비 등) 확정 이후 착공 시점에 맞춰 지원하고 있습니다.
 - '23년에는 평택·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각 500억원씩 既 지원하였으며, '24년에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154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 기업별 투자 규모 등에 따라 기반시설 총사업비의 최대 30%, 500억원 한도 내 지원
 - 타 특화단지의 경우 아직 착공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추후 조성 및 구축 상황에 따라 착공시점에 차질 없이 적기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지자체별 필요 예산은 '23.3월 특화단지 신청서에서 지자체별 향후 필요 희망액을 제출한 것으로, 아직 기반시설 투자계획 및 총사업비 확정·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 예를 들어, 용인 국가산단은 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 단계로 '26년 이후 착공, 새만금 산단은 아직 계획 수립 중으로 '25년 이후 착공 예정입니다.

□ 한편, 정부는 기반시설 지원 이외에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시책을 망라하여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재정) 첨단분야 인력양성 규모를 23년 1.6조원 → '24년 1.9조원으로 확대* 하고, 내년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0.1조원)를 신설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실증, 상용화를 위한 저리 융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첨단분야 특성화대학(8→21개교), 부트캠프(10→42개교), 아카데미(520→1,400명) 등

- (세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포함)의 설비·시설투자 및 R&D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투자) 한국 25~35%, 대만 5%, 미국 25% (R&D) 한국 30~50%, 대만 25%, 미국 20%

- (금융) '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12.9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합니다.

* 반도체(2.8조원), 디스플레이(0.9조원), 이차전지(5.3조원), 바이오헬스(3.9조원) 등('23.2, 정책금융지원협)

- (규제)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및 타임아웃제*, 용적률 완화(최대 1.4배) 등의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허가 신청시 처리결과 15일내 통보, 특별사유가 없으면 60일 이후에는 인허가 간주

□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달리, 특화단지의 성공적 조성·운영을 위해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회”를 발족(9.22일)하여 현장애로 해소 및 적기 지원을 위해 범부처가 협업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책임자	과 장	강경표 (044-215-7310)
		담당자	사무관	유다빈 (dahbin23korea.kr)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책임자	과 장	김승태 (044-215-4530)
		담당자	사무관	최 연 (choiy0627@korea.kr)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	책임자	과 장	이규봉 (044-203-4270)
		담당자	사무관	문경준 (nkj3862notied@gmail.com)